

민주,尹 ‘日 무릎’에 “반민족적 막말…대통령, 국왕아냐”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 인식”
“日 용서는 대통령 아닌 국민 몫”
“日안 되고 韓 무릎 꿇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뷰 중 일본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반민족적 막말”이라며 “5년 임기 대통령은 국왕이 아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WP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일본 총리 말로 착각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 다수는 굴욕외교라고 하는데, 대통령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가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건가”라며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발간 등을 질问了.
또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 걸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받

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침탈당한 우리 아픈 역사도 모자라 100년 전 행한 과오에 대해 반성,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 애걸이라고 하겠다”고 비난했다.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일본 극우 인사나 할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며 “일본에 침략당해 수십 년 간 고통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선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면죄부를 줄 권리가 위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5년 임기 대통령은 국왕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존엄과 생명을 희생시키며 일본에 끝없는 구애를 갈구하는 미래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에 더해 “용서하는 건 윤 대통령 몫이 아닌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 가슴을 명들게 한 발언에 책임 있는 게 진정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인지 귀와 눈을 의심했다”며 “번역을 잘못한 것이겠지 생각했다”고 개탄했다.
또 “민주당은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없다”며 “노조는 때려잡고 야당은 무시하고 야당대표는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면서 왜 외국만 나가면 저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릎 꿇으면 안 되고 한국은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며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고 국가관이 잘못된 윤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경숙 원내 부대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결코 용서,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막말”이라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는 지난 24일 WP가 공개한 윤 대통령 인터뷰 중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발언에 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영어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후 WP 기자는 트위터에 녹음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외교를 비판하면서 방미 성과를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중 경험도 핵심으로 삼고 헬륨 미국과의 안보 다지기가 중요하다”며 “부디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상회담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다고 느껴지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또 대중 반도체 수출 억제 요구 관련 보도를 상기하고 “동맹은 식민지가 아니고 상호 존중과 균형이 기본”이라며 “동맹이 아닌 보

통의 사이조차도 상도의가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장지만 바꾼 봉투 속 청구서만 받아오는 취중 계약 수준 거래로 끝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친미, 친일 말라는 게 아니라 한 쪽에 쏠린 외교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방미 성과는 안보 동맹 강화가 아닌 경제 실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또 “지리적 여건이 다른 미국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외교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건 최대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동북아 나토 사령관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한미 동맹이 안보만 최우선해 긴장을 고조시키면 최악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한반도가 신냉전으로 인해 6·25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막고, 기필코 평화를 지켜 나라과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이슬기자

민주 ‘尹 인터뷰, 번역 오류’에 “기자가 전문공개…국제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24일 미국 순방 중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여당이 ‘주어를 생략한 오역’이라고 옹호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대통령은 제대로 말했는데, 국민이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떠나며

“뉘라 변명해도 친일 본색 못 숨겨…尹 사과하라”

일본을 두둔하는 궤변으로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국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공식한 변명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가짜뉴스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며 “기사 내용 그대로. 기자는 여당이 번역 오류를 제기해서 녹취 오디오를 재확인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올려드린다면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가. 방미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고나 치고 거짓말로 응수하다가 이제는 그 거짓말도 들통나 버렸다”고 맹공했다.
그는 “이쯤되면 대통령의 평소 역사 인식이

친일 사관으로 굳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뉘라 변명과 역지를 늘어놓아도 윤 대통령의 친일 본색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일본 편이나 드는 대통령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바라봐야 하나.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유나기자

대통령실 “한미 정상, 우크라이나·대만 해협 문제 등 논의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

“우크라 무기지원이 의제는 아닐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

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는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질문을 받고 “글로벌 이슈를 말하며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럼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지원이 의제에 오르느냐, 그건 현재까진 아니라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글로벌 이슈 등에서 양국이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 어느 (국가)정상이든 이야기해야 정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